"도청별관 해법 내일까지 매듭"

박주선의원, 공대위 제시안 받아 추진단과 본격 협상 나서

7일까지 타결 안될땐 지체보상금 물어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문화전당 내 도청별관 철거 논란이 이번 주중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의 중재를 맡은 민주당 박주선의원(광주 동구)이 5일 5·18 단체들로 구성된 '옛 도청 별관 보존을 위한 공동대책위'(공대위)로부터 건네받은 최종안으로 6일부터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추진단)과 본격 협상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공대위가 제시한 최종안 가운데 제1안은 도청별관 원형보존, 제2안은 현재 3층 건물인 별관의 3분의 1을 헐되 3분의 2를 보존하는 것이 골자다.

박 의원은 공대위 제시안, 자신이 구상한 제3안을 갖고 문화중심도시 추진단과 협상에 나서 이르면 6일, 늦어도 7일까지 이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추진단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 문제가 협상의 마지노선인 7일을 넘겨 또 다시 장기화할 우려도 있다. 추진단은 현재 2개월째 중단되고 있는 문화전당 공사가 7일까지 재개되지 않을 경우 8일부터 하루 1천100만원씩 공사지체 보상금을 시공사측에 줘야 한다.

◇**추진단 입장**=5일 현재까지 도청 별관 완전철거라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별관을 존치할 경우 문화전당 전체 설계를 변경해야 하는 등 전체 일정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진다는 판단이다. 추진단은 그동안 별관 원형보존과 일부 철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는 입장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밝혀왔다.

그러나 중재에 나선 박 의원과의 협상을 통해 추진단은 물론 광주 시민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제3안이 도출될 경우, 이를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병훈 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은 "박 의원과 협의를 통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직은 명확하게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공대위**=공대위는 최종 중재안을 통해 그동안 거듭 주장해온 도청별관 원형보존이라는 큰 틀을 유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번 안은 애초 '별관의 벽돌 한 장도 건드릴 수 없다'는 강경 방침에서 다소 후퇴한 것이기는 하지만, 원형보존이라는 전체 주장에는 변함이 없는 내용이다.

따라서 추진단이 이를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공대위가 박 의원에게 협상과 중재의 전권을 넘기지 않았다고 밝히는 점도 협상의 한계로 부각되고 있다.

공대위 측은 자신들이 제시한 1, 2안 외에 별도 협상안이 제시될 경우 다시 이 문제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공대위 관계자는 "공대위가 당초 제시한 안 외에 또다른 안이 나올 경우 박 의원이 공대위와 재논의 과정을 거치야 한다"고 못 박았다.

◇**시민단체연석회의**=공대위가 공동 중재안 마련을 위한 협상을 포기함에 따라 다음 주초 별관 문제에 대한 별도 해법을 제시하는 등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입장이다.

당초 광주시민단체 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 연석회의'는 공대위와 공동 중재안을 마련키로 했으나, 공대위가 단독안을 밀어붙임에 더 이상 협상은 무의미하다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연석회의는 다음 주초 그동안 공대위와의 협상과정, 별관문제 해법 제시를 위한 기자회견 등을 갖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4대강 살리기 기획단 출범 5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영산강을 비롯한 4대강 살리기 기획단 현판식에서 국토해양부 정종환(왼쪽에서 네번째) 장관, 김희국(〃 두번째) 기획단장 등 관계자들이 현판식을 마친 후 박수를 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환경부, 문화관광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문화재청 등과 합동으로 기획단을 출범시켰다. /연합뉴스

호남고속철 완공 시기·J프로젝트 심의·F1 국회 통과

지역현안 이번달 운명 갈린다

광주·전남지역 현안 사업들의 향배가 이번 달에 결정될 전망이어서 광주시와 전남도 등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지역 정치권의 총력전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호남고속철도 2012년 조기 완공' 여부는 이달 중순께 최종 확정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중순, 늦어도 이달 하순께는 호남고속철도 수정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라며 "최종 완공 시기는 아직 확정짓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호남고속철도의 완공 시기는 2014년 안이 알려진 가운데 오송~광주 2013년, 광주~목포 2015년 완공설도 흘러나고 있다.

그러나 호남고속철도의 무안 국제공항 경유는 국토해양부 내부에서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과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의 이용섭 의원(광주 광산을)은 "상임위 활동은 물론 국회 국가균형발전특위 차원에서 호남고속철도의 조기 완공을 촉구할 계획"이라며 "이 대통령도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의 보다 전향적인 자세 전환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의 최대 현안 법안인 F1 지원법도 이번 달에 결정적인 고비를 맞는다.

이번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오는 4월, 6월 임시국회에서도 F1 지원법을 놓고 진통이 불가피, 2010년으로 예정돼 있는 F1 대회의 성공적 개최에 악영향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6일 전남도 주관으로 국회에서 개최되는 F1 지원법 설명회를 계기로 민주당 지도부가 F1 지원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제경기지원 특위 소속의 김영록 의원(해남·진도·완도)은 "전남도가 F1 지원법에 대해 여러 가지 보완 방법을 마련한 만큼 국회 본회의 통과 전망이 밝아진 상황"이라며 "당 지도부가 F1 지원법을 당론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기에 진통을 겪고 있는 J프로젝트(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조성사업) 개발 계획도 이르면 이달 내에 승인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중도위)가 이달 말 회의를 다시 열고 J-프로젝트 개발 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남도가 전체 6개 사업지구 가운데 2개 지구만 우선 심의해 달라고 재요청한데다 중도위도 개발 계획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없다는 점에서 지자체와 정치권이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될 전망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거취 내주께 가닥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거취가 내주께나 가닥이 잡힐 예정인 가운데 '교체론'이 힘을 얻고 있어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잇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5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의 거취 결정 시기와 관련, "아직까지 김 내정자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특별히 바뀐 게 없다"면서"오늘 내일 중에 결정이 내려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내일은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날"이라면서 "결과가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법적 책임과 국민정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김 내정자의 거취 문제를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6일 발표될 검찰수사 결과와 함께 여론의 흐름을 좀 더 지켜본 뒤 이르면 내주초에 김 내정자의 거취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내부에선 유임론과 교체론이 교차하는 가운데 김 내정자가 결국은 도덕적 책임을 지고 물러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김 내정자를 유임시킬 경우, 야당의 크게 반발하는 것은 물론 국민 여론도 긍정적이기 보다는 부정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명박 대통령이 내주초에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며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책임을 묻지 않고 그냥 지나가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부양자 있어도 최저생계비 지원

당정, 차상위계층 한시적 긴급보호제 추진

정부와 한나라당은 5일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 수준이지만 부양의무자가 있거나 전세 등 부동산재산을 갖고 있어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 일정기간 최저생계비를 일부 지원하는 '한시적 긴급보호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주 소득자가 사망 또는 가출, 행방불명, 구금당하거나 화재,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제도'를 확대한 것으로 현재는 금융재산과 소득 및 부동산 등 총 재산 규모가 9천500만원 이하인 가구에만 적용되고 있다.

당정은 또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 또는 기피할 경우 부양비를 강제로 징수한 뒤 지원하던 기존 방안에서 '선(先) 지원-후(後) 징수'제도로 변경,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부양의무자의 실직, 휴·폐업 등으로 기존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가구를 적극 발굴해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밖에 당정은 민생안정 지원사업이 중복·누락을 방지하고, 신속히 위기 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민생안정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박지경기자 jkpark@

李대통령 취임 1주년 이전에 재산환원 방법 등 입장 발표

이명박 대통령은 늦어도 취임 1주년(2월25일) 이전에 재산환원 방식 등과 관련한 구체적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재산환원 문제가 취임 1주년 전후로 결론이 나느냐'는 질문에 "그때까지는 충분히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재산을 환원한다는) 입장 정리는 이미 돼 있다"면서 "재산문제 처리를 논의할 '추진체' 인선문제 이런 게 논의 중인데 큰 가닥은 잡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그때까지는 알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취임 1주년을 맞아 발표하느냐'는 질문에 "그런 형식을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조용히 진행하면서 가는 것이지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거나 이벤트처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